

# 도내 SOC예산 감소폭 전국 최고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70% 줄어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완료 주요인  
대형 SOC사업 없어 건설절벽 우려

정부의 내년도 SOC예산 감축 기조 속에 강원도는 올해에 비해 70%에 가까운 SOC 예산이 줄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건설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2018년도 지역 SOC 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의 지역 SOC 예산안은 올해 예산 11조 6811억 원에 비해 4조 4361억 원(38%)가 삭감된 7조 2450억 원이다.

강원권 SOC 사업 예산은 3182억 9400만 원으로 전년 확정치(1조 376만 5600만 원)에 비해 69.3%가 줄며 전국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어 △대구·경북 64.8% △부산·울산·경남 43% △충청권 4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감소율은 8.2%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다수 사업들이 완료된 것이 내년 국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 내에는 원주~강릉복선전철 이후 대형 SOC 사업이 없어 이같은 예산절벽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해 경제위축이 예상된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 SOC 예산 삭감폭, 지역별 큰 편차

내년도 SOC 예산안의 대폭 삭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SOC 예산 삭감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역 SOC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토부의 지역 SOC 예산 정부안은 올해 예산(11조6811억원) 대비 38%(4조4361억원) 삭감된 7조24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SOC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9.3% 줄어들며 가장 큰 삭감폭을 기록했다. 강원권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이 올해부로 완료된 것이 내년도 국비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대구·경북 64.8%, 부산·울산·경남 43%, 충청권 42.4% 등 순으로 SOC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수도권은 8.2% 삭감되는데 그쳐 타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내년 요구액 대비 편성안 감액률 충청권, 28.7%로 격차 가장 커**

**감액 예산으론 부산·경남·울산권 5802억 깎여 전체의 26.9% 차지**

김도읍 의원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은 강원권과 같이 사업의 완료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필요 예산 대비 감소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사업부처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을 비교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가 당초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9조3995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편성하며 2조1545억원(22.9%)을 감액했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부처 요구예산(1조7096억원) 대비 28.7% 삭감돼 가장 큰 감액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산·경

남·울산권 27.8%, 강원권 26.8%, 호남권 22.5%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권은 14.3%로 가장 낮은 감액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감액예산 비중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지역 SOC 예산 2조1545억원 중 부산·경남·울산권 감액예산이 5802억원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24.5%(5284억원), 충청권 22.8%(4910억원), 호남권 16.4%(3540억원) 순으로 삭감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는 151억원(0.7%)으로 부산 감액의 2.6% 수준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삭감됐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SOC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kwon88@

## ‘적자시공’ 벗어나야 건설 일자리 창출

# 공사비 정상화 ‘시동’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한 공사비 정상화 속제에 건설업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발주기관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현실화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김두관·박명재 의원 등 15명이 넘는 의원들은 ‘공사비 정상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본지 8일자 2면 참조>

건설기업들은 공공공사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로 박한 공사비를 지목하고 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공사비가 책정되고 예정가격 산정과 입·낙찰 단계를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깎이는 구조다. 시공 단계에선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계약분야 담당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와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김연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은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도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선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적정 공사비 책정을 위해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가 건의한 ‘300억원 미만 사업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낙찰률 비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예정가격(주정가격)을 부당하게 정해 입찰에 부친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계약포기 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국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입·낙찰 단계에선 낙찰률 상향조정이 관건이다.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고난이도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낙찰률이 5%가량 낮은 것은 모순”이라며 “‘하한율 30% 배제’ 등을 통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새 평가항목을 개발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선 종심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상·하위 20% 제외)과 동점자 처리기준(저가투찰→균형가격 근접자), 수의계약 협상가격 기준(종심제 평균 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문제도 이슈다. 김 과장은 “TF(특별팀)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실비산정기준을 이달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간접비 지급 개선과 함께 ‘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낙찰률 상향조정과 함께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  
“개선 시급” 공감대 확산  
국회선 국가계약법 개정  
정부는 산정시스템 정비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을

입·낙찰 단계에선 낙찰률 상향조정이 관건이다.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고난이도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낙찰률이 5%가량 낮은 것은 모순”이라며 “‘하한율 30% 배제’ 등을 통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